

# 光州日뢖



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(062)222-8111 제21231호 1판 (음력 3월 14일) kwangju.co.kr 2020년 4월 6일 월요일

### 노사상생 팽개치고 경영진 밥그릇 챙기기

#### 긴급점검 - 광주형 일자리

#### 〈1〉 리더십 부재가 부른 참사

우려가 현실이 됐다. 대한민국첫 '노·사 ·민·정'대타협을 기반으로 태어난 '광주 형 일자리' 사업이 노측의 불참 결정으로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. 사업 추진 6년 만이자, 지난해 1월 31일 노사상생발전협 정 체결 후 꼭 1년 3개월 만이다. 결론부터 말하면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꼽

지난 2일 광주시청 앞에서 협약 파기를 선언한 노동계는 기자회견문 첫 머리에 "정치 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"고 썼다. 노동계의 강한 불신은 완성차 합작법인인 (주)광주글로 벌모터스(대표 박광태) 설립 시점부터 출 발한다. 전과자와 비전문가들이 주요 임원 에 선임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데 따른 것이다.

광주글로벌모터스 첫 주총 노동자 초임 3천만원 묶고 이사들 연봉 3억8천만원까지 참다 못한 노동계 파기 선언 박광태 대표 사퇴 여론 확산

광주지역 노동계와 시민·사회단체는 물 론 일부 광주시의원과 정치권도 "임원 선 임부터 잘못됐다"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 다.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 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 받아온 '광주형 일자리'를 파탄으로 몰고간 원인 과 문제점을 들여다 봤다.

'광주형 일자리 사업'에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지난 3월 청와대에 '광주형 일 자리 합작법인인 (주)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박광태 대표 등 주요 임원을 전문가로 교체 해야한다'는건의서를전달했다.노동계는 4월 7일 청와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회 적 협약 파기 선언식도 예고했다.

노동계경고에도광주글로벌모터스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. 대주주인 광주시만 노동계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.

오히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쥐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 스는 '노사상생'이란 태동 목표조차 모두 광주시에 떠넘기고, 제 이익을 챙기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26일엔 첫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와 부대표 등 상임 이사의 통합 연봉을 최대 3억 8000만 원으로 한정하는 안까지 통과시켰다.

노동계가 '협약파기'라는 배수진까지 치 면서 요구해온 노동이사제 도입, 원·하청 관계개선 시스템 구축,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, 시민자문위원회 설치, 임원임금 노 동자 2배 이내 책정 등을 정면으로 무시하

고 나선 것이다.

임원이긴 하지만, 광주형 일자리 사업 4 대 원칙 중 하나인 적정 임금 및 적정 노동 시간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를 크게 자극했다.

노동계 한 관계자는 "시민세금으로 자동 차 공장을 짓고,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"이라 며 "노동자 연봉 평균 초임은 3000만원 수 준으로 정해 놓고, 대표 등 임원은 수억원 대의 임금을 가져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" 고 분노했다.

결국 참다 못한 노동계는 파기 선언식을 예정보다 앞당긴 지난 2일 진행했다. 한국 노총은 이날 파기 선언식 자료를 통해 "대 표이사는 배임・횡령으로 유죄까지 받았던 사람"이라며 "왜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이 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느냐. 비전문 가인 전직시장과 퇴직 공무원은 즉각 물러 나야 한다"고 주장했다. ▶2면으로 계속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

접수

음악·무용·국악 4월 16일(목)~22일(수) 5월 11일(월)~13일(수)

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'제65회 호남예술제'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, 호남 신학대학교, 광주패밀리랜드, 우치공 원 등에서 열립니다.

올해 창사 68주년을 맞은 광주일보 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예술꿈나 무들의 등용문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낸 대회입니다. 호남예술제에 여러 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.

■ 참가자격: 전국 초·중·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

미술·작문

- 경연기간: 5월 6일(수)~6월 6일(토)
- 참가부문: 음악·무용·국악·미술·작문
- 접수방법 :

우편신청: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앞 인터넷신청: http://art.kjmedia.co.kr (온라인 카드결제 가능)

- 경연일정: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
- (세부일정은 접수마감 후 확정 4월 27일(월) 발표) ■ 시상: 우수학교상
- 개인 및 단체 최고상,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 ■ 문의: 062-220-0541
- 주최 : 광주일보·아시아문화
- 후원: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·광주광역시교육청·전라남도교육청·목포시·나주시

#### 光姗日報社

광주 '광천동 재개발' 본격화 되나 ▶6면

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새 도약 ▶10면

2격수를 아시나요? 맷감독의 시프트 ▶20면

Passion [열정], Vision [꿈], ruth [진리]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S십시오!! 입학문의 학부 062) 605-1114 대학원 605-1115



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휴일을 맞은 5일, 광주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광주 동남구갑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후보는 쓰 레기들을 수거하며 이름을 알렸고〈왼쪽〉, 민생당 장병완 후보측은 운동원들이 공원 광장에서 율동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총선 D - 9

####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・휴일 거리 · 시장 등 곳곳서 유세전

4·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과 휴일인 4~5일 광주와 전남 지역 여 야 각당 후보들은 선거구 곳곳을 돌며 표밭을 다졌다. 후보들은 코로나19 우려에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도 시장이나 상가 등 지를 돌며 지지를 당부했고, 거리 곳곳에 는 유세 차량이 등장해 본격적인 선거의 시작을 알렸다. 〈관련기사 3면〉

간절한 후보들 차분한 유권자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 당 이병훈 후보가 유세 차량을 타고 주요

도로 나들목과 아파트단지 주변을 누볐 다. 민생당 박주선 후보는 가벼운 산책에 나선 유권자를 만나고자 무등산 국립공원 과 푸른길 공원을 찾았다. 또 무소속 김성 환 후보는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선거운 동원 없이 홀로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녔다. 정의당 최만원·국가혁명배당금당 이향숙 후보도 거리 인사와 공약 알리기로 유권자에게 눈도장을 찍었다.

광주 서구을 민주당 양향자 후보는 토론회 에 이어 풍암 호수공원과 운천저수지를 차례 상기를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. 민생당 천정 배 후보도 금당산을 찾아 등산에 나선 유권 자들을 만났고 이어 풍암호수 일대에서 선거 운동원들과 유세를 펼쳤다. 정의당 유종천 후보도 풍암호수공원에서 유권자들과 이야 기를 나누며 얼굴 알리기에 노력했다.

전남지역에서도 후보들이 전통시장과 각 마을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. 이 지

역 격전지로 꼽히는 목포에서는 민주당 김 원이, 민생당 박지원, 정의당 윤소하 후보 로찾아 나들이객에게 인사를 건넸고 풍악동 가 주말과 휴일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다. 김원이 후보는 청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 났고 유달산을 찾아 유권자를 만났다. 박지 원 후보는 홀로 유세차를 타고 목원동, 삼 향동, 원산동 일대를 돌며 지나가는 유권자 들에게 인사를 했다. 윤소하 후보도 청호시 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고 이 어 유달산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## 진짜가 나타났다 국민공천 개혁후보 17명!



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습니다. 열린민주당은 12공약으로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

- 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②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③ 국회의원 비례대표, 국민참여경선 의무화
-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
- ひ론 오보방지법 제정 ⑧ 어린이집·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
- 🕕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🕕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🕡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